

#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an Aged Society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저출산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에

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6년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가 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 중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제3차 기본계획의 출발점이 된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령사회 삶의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은 크게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고령친화적 주거 및 사회환경이라는 네 가지 영역 안에서 설계되어 추진되어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지난 1~2차 기본계획과 관련없는 별개의 계획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정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각 영역별로 되짚어봄으로써 제3차 기본계획의 각 영역별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층소득보장제도 구축에 주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

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도입하여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가입자나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자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가입자 수도 많지 않아 노년기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적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이용의 포괄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지난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돌봄의 사회화와 노인돌봄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에 기여하였다. 노령기 기초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운동지원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틀니 보험 적용, 구강검진 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 치매

표 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고령사회정책 주요 내용

구분	영역	제1차 기본계획 세부내용	제2차 기본계획 세부내용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공적연금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적연금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 가입자별 퇴직연금 복수가입 허용 -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확대	- 확정형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비율 상향조정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축소 및 퇴직연금 가입 유인 - 퇴직·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 - 농지연금 도입
	노동기회 제공 (베이비붐 세대)	-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 시니어 창업지원
건강 보장	노후건강 관리	- 취약계층노인 건강관리 - 노인운동지원사업 및 건강관리 강화 - 5대암 검진 수검률 제고 - 노인구강서비스 확대 -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 보건소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도입
	노인장기 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구축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사회 참여	노인일자리	-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인프라 확충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여가문화 프로그램	-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보급 - 노인여가활동 인프라 마련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전문화 - 고령자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보급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주거	- 고령자주거안정법(가칭) 제정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단계적 확대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노인권익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효행장려여건 마련
	교통 및 이동권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지속 설치 -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 - 보행우선구역 확대 - 노인보호구역 도입 - 노인교통사고줄이기 운동추진	- 철도 및 지하철 승강설비 확충 - 저상버스 보급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노인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성화

자료: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포함)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조기검진사업 및 국가치매전략 수립 등을 실시해 왔다. 무엇보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도입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 이용노인이 2.9%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6.6%로 급증하였다<sup>1)</sup>.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사후적 관리에 치중되어 증장년층에 대한 예방적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노인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노인우울 등 노인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 역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노인 등의 급증은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본계획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100세 시대의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켜왔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져왔으며, 문화여가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자 대상 여가문화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의 사회참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노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후의 문화여가를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 비중은 높으며, 현재 노인보다는 문화여가 경험과 욕구가 높은 미래 노인세대에게 적합한 문화여가 인프라 및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노인의 낮은 여가향유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미래노인의 여가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여

가정책의 선도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여가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거문제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고령친화적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승강시설 정비, 저상버스 확대,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행 우선구역 등),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의 독거 및 노인부부에 대한 사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교통 등 노인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환경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구조의 변화와 노화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형태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및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발생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3.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가. 기본방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차 및 제

1) 국민건강보험(2015).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liv.

표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관련 과제

구분	세부영역	과제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1인 1국민연금 확립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기초연금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증대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책
노후준비 여건 확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후준비지원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추진체계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노인안심생활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2차 기본계획의 연속선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사전예방적 접근 강화, 후기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령사회 정책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상 노인을 포괄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 중년층에 해당되는 인구집단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세대통합적인 관점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노후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공적 및 사적연금, 그리고 노후준비 과제의 주요 대상은 주로 노년기 이전의 청·장년층이 되며, 고령자 건강과 주거환경의 간접적 대상자는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주민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사회정책이 고령자를 둘러싼 가족과 지역사회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노인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노년기의 위험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정책설계를 강화하였다. 1인 1국민연금 확립이나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강화, 노후준비지원 확대, 그리고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해당되는 상당부분의 과제들은 노인빈곤, 노인돌봄,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

한 선제적 접근으로서 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 고령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셋째, 후기노인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노인의 의료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후기 노년기의 돌봄과 치료, 그리고 웰다잉(well-dying)의 관점에서 임종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15.7%이지만, 85세 이상 후기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노인인구의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sup>. 즉,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후기노인인구가 안고 있는 의료 및 돌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질 제고와 인프라의 내실화, 치매전문시설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과 서비스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 나. 주요 내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분야를 위한 세부 정책내용은 크게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후소득보장 강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관련이 높다. 2014년 현재 노인빈곤율은 49.6%로 지난 10년간 노인빈곤율은 감소될 기

2) 통계청(2011. 12. 7.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 및 미래 노인의 소득단절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고, 노인빈곤이 건강악화나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노인자살 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청년 및 중년기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퇴직 및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공적연금의 보완장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노후준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와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소득보장에서는 미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의 노후소득이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내실화와 주택·농지연금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및 조정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고령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농지연금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은 노인의 건강

성을 증진시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의료비와 돌봄부담 등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의 신체활동 증진 및 질병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연장시키고, 여가문화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늘어난 건강수명 기간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해 돌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포괄성 등을 보장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안전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학대예방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 건강생활보장,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세대간 이해 증진,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의 세부영역별 정책 과제들이 추진된다.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에서는 건강마일리지, 건강 백세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를 활성화하고, 낙상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노인 정신건강관리 강화, 포괄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도화, 치매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세대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소규모 고령자 자원봉사단체 발굴·지원,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강화,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등이 구성되어 추진 될 계획에 있다. 이와 함께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해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날' 운영, 세대공감 프로그램 지원,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등의 세부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안에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고,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신규로 공급하고,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후 LH가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독거노인 등에게 공급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의 의무화, 인지기능검사 표준화, 면허갱신강화 등의 과제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예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함의

제3차 기본계획은 노인인구 증가로 파생되는 노인빈곤, 건강, 돌봄, 사회적 고립과 자살, 안전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부 정책간의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

책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권 내'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 국민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강화하였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여성,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납부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택 및 농지연금 가입 제약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예방-치료-돌봄의 연속적 건강지원체계 안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 대한 적극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 이전 세대 및 노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노인의 낙상, 약물 오남용,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 노인치매, 노인자살, 노인우울 등에 적극 대처하고, 노인 건강이나 돌봄의 문제해결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설계를 개선하였다.

셋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세대통합적 관점을 적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은 바로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인 이외의 세대에도 함께 참여하고 영위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전체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국내·외 고령사회 정책은 노년층만을 위한 지엽적인 정책이 아닌 중년층과 더 나아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이 가지는 문제는 노년기 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노년기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생애누적적 혹은 개인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노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주거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본계획에서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관련한 정책과제는 주로 고령자 임대주택 확대와 주택개량을 중심을 진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변화하는 노인의 주거수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전세 임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접목시킨 공공실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등을 도입하였다. 여전히 해외 선진국에 비해 노인주거모델의 개발이나 적용이 미진한 실정이나 기본계획 안에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연동하는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향후 노인주거-복지-돌봄이 연계된 다양한 노인주거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간은 고령사회 교통안전정책에서는 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노인보호구역이나 노인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심이었으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취약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 권고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연관된 문제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 함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5. 나가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이번 기본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영역과 과제만으로 고령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이 수정·보완되고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